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2. 1. 4(수) 14:00 이후		
배 포 일 시	2012. 1. 4(수) 10: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경쟁력전략과
담당과장	유형철 (2150-2870)	담당자	홍가영 사무관 (2150-2872)

제목: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

- ☐ 기획재정부는 2010년에 이어 2번째로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
 - 우리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과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259개 지표를 사용하여 OECD 34개국과 비교
 - * “경제-사회통합-환경-인프라” 4부문으로 구성
 - 지속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6개 부문(기술혁신, 사회자본, 고등 교육, 양극화, 외국인력 유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정책과제 분석
- ☐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이 양호하나, 사회통합 부문과 인프라 부문 중 사회자본·부존자원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경제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사회통합·사회자본 등 경제 외적 요소의 개선이 요구
 - 환경 부문의 경우 현재의 환경 부하 정도는 높으나 환경관리 시스템과 개선 잠재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
- ☐ 향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국가경쟁력 강화 종합전략 등 정책방향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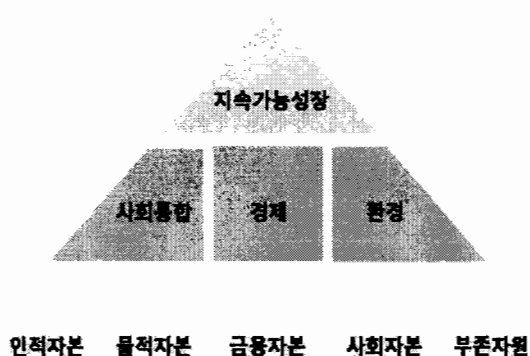
※ 별첨 :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I.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배경

- 글로벌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의 경쟁력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취약점에 대한 개선노력 강화 필요
- 우리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과 객관적 지표(259개)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발간(2010년에 이어 두 번째)
 - 설문지표 의존도가 높은 IMD, WEF 등과 달리 객관성 제고를 위해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OECD 34개국과 비교
 - “경제-사회통합-환경-인프라” 4부문으로 구성된 모델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통합 및 환경을 포함하여 광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제공
 - 우리나라의 지속적 취약점으로 평가된 6개 분야에 대하여 현황 및 정책과제를 연구한 이슈분석 시행

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경쟁력 모델



주요 국가경쟁력 모델과의 비교

모 델	지 표 수 (통계/설문)	비교국가수
본 보고서	259개 (247/12)	OECD 34개국
I M D	254개 (139/115)	59개국
W E F	111개 (31/80)	142개국

II.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1. 전반적 평가

◇ 경제부문이 양호하며, 사회통합 부문과 인프라 부문 중 사회자본·부존자원 분야가 취약

□ (경제) 거시경제지표와 기술혁신 부문이 우수하고 자본공급이 풍부하나 노동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

○ 경제규모가 OECD 10위권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경상수지, 외채, 정부부채 등 거시지표가 우수

○ 낮은 청년·여성 인력활용, 취약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등이 성장 잠재력 추가 확충 저해 요인

○ 높은 정보화 수준, 교육 투자, R&D 투자 등 생산성 향상의 양적 조건은 갖추어졌으나 노사관계 및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 등 질적 조건 개선 필요

□ (사회통합) 사회복지 지출의 현 수준은 낮은 편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며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속화 전망

○ 소득분배·양성평등 등 형평성 지표*가 하위권이고,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안전부문의 개선이 필요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10년 개선되었으나, 비교 가능한 '10년 OECD 통계가 없어 '08년 자료 사용

○ 낮은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이상의 기대수명 향유

□ (환경) 경제·사회 활동에 따른 환경부하 및 CO₂ 배출량은 높은 수준이나, 환경관리 시스템은 양호

- 신재생에너지 활용도가 아직 낮고 에너지소비가 높으나, 오염원 관리 및 재활용률은 상위권이며 녹색성장·환경개선 노력도 양호

□ (인프라) 물적·금융자본은 양호하나 부존자원이 빈약한 것이 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자본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필요

- 인적자본 지표는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나 교사 1인당 학생수,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률 등은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 도로·철도·통신·전력 등 물적자본은 양적·질적으로 양호하며 금융자본의 규모와 은행 건전성도 높은 수준
- 법치신뢰, 부패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고, 신뢰수준도 낮아 사회자본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

중분류별 우수·보통·취약 지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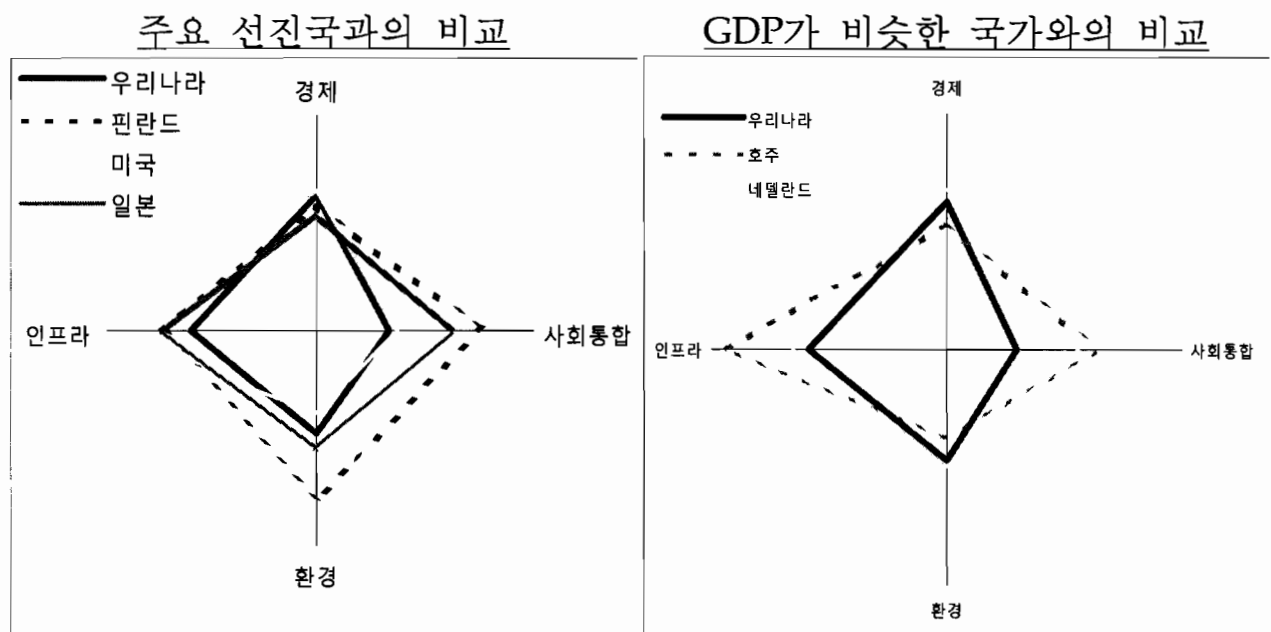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우수	보통	취약	계
경제	경제성과	2	7	0	9
	노동공급	4	10	6	20
	자본공급	7	3	0	10
	기술혁신	11	8	2	21
	기업환경	10	23	4	37
	거시환경	8	19	2	29
	산업구조	5	15	10	30
합 계		47	85	24	156
대분류	중분류	우수	보통	취약	계
사회 통합	사회지출	2	1	3	6
	형평	0	2	3	5
	수명/보건	3	5	2	10
	안전	0	1	2	3
	제도 및 관용	0	3	1	4
	합 계	5	12	11	28
대분류	중분류	우수	보통	취약	계
인프라	인적자본	5	5	5	14
	물적자본	3	5	0	8
	금융자본	0	6	0	6
	사회자본	1	7	2	9
	부존자원	0	2	7	9
합 계		9	25	14	48
대분류	중분류	우수	보통	취약	계
환경	환경오염도	1	7	2	10
	환경관리	3	4	1	8
	녹색산업	2	4	3	9
합 계		6	15	6	27

2. 주요국과 비교

□ (선진국과 비교) 우리나라는 미국·일본·핀란드와 경제부문은 유사하나 주로 사회통합·환경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

○ 미국이 사회통합·환경부문이 취약한데 비해 일본과 핀란드는 네 부문이 균형잡힌 모습

□ (GDP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호주, 네델란드와 비교시 사회통합 분야의 취약성이 두드러짐



□ (평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 내적인 요소의 개선과 함께 사회통합·사회자본 등 경제 외적인 요소의 정비를 통한 내실 강화 필요

○ 형평성, 반부패, 신뢰, 공정성 강화, 법치주의 확립, 노블리스 오블리제 등 나눔의 문화 정착, 합리적인 노사관계, 사회구성원 간 결속력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

3. 부문별 우수·취약지표

분류	우수지표	순위	분류	취약지표	순위
경제	연평균 근로시간	1위/33개국	경제	합계출산율	30위/34개국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2위/30개국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위/24개국
	총저축률	3위/32개국		청년층 고용률	29위/34개국
	R&D 지출비율	4위/30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30위/34개국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수	1위/34개국		ICT 서비스 수출비중	30위/32개국
	ICT 제품 수출비중	3위/34개국		해고비용*	31위/34개국
	노동생산성 증가율	1위/34개국		임시직 근로자 비율*	26위/31개국
	전자정부지수	1위/30개국		노조조직률	30위/33개국
	폐업 비용*	2위/34개국		(파업)근로손실일수*	24위/32개국
	조세 격차*	4위/34개국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26위/31개국
	국민 부담률*	5위/33개국		FDI 유입 잔액	32위/34개국
	일반정부 재정수지	4위/32개국		서비스업 생산성	31위/32개국
	총외채 비중*	1위/31개국		보건/사회복지 고용비중	32위/32개국
	외환보유액	2위/34개국		자영업자 비중*	27위/30개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1위/32개국			
사회 통합	고령인구*	3위/30개국	사회 통합	공적연금 지출	29위/30개국
				사회복지 지출비중	33위/34개국
				성격차 지수	30위/31개국
				여성임금 비율	19위/19개국
				1천명당 의사수	29위/30개국
	국민의료비 지출비중*	3위/30개국		도로사망률*	27위/30개국
				산업재해 사망률*	22위/23개국
		언론의 자유	28위/31개국		
환경	도시쓰레기 재활용률	1위/28개국	환경	총 CO ₂ 배출량*	25위/30개국
	정부재정의 환경보호 지출비율	3위/29개국		PM10 농도*	25위/30개국
			신재생에너지 비율	30위/30개국	
인프라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2위/25개국	인프라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28위/30개국
	국제학업성취도(수학)	4위/30개국		공식적·비공식적 단체 참여비중	16위/18개국 12위/21개국
	가정용 유선전화 월이용요금*	1위/34개국		인구밀도	29위/29개국
	전기요금*	2위/34개국		원유·천연가스 확인 매장량	22위/22개국 20위/23개국
			식량자급률	27위/30개국	

*표한 지표는 낮은 순서로 순위를 산출

4. 2010년도와의 비교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경제부문 지표가 주로 개선

- 사회·환경지표는 그 특성상 변동이 크지는 않았으나, 에너지 사용 구조 관련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
- 인프라는 교육관련 지표가 개선되었고, GDP대비 채권발행 잔액 비중 등 금융지표가 일부 악화

[1] 개선지표

분류	지표명	전년도 순위	올해 순위	비교 국가수
경제 (16개)	1인당 GDP(PPP 기준)	(‘09) 25위	(‘10) 22위	34
	경제성장률	(‘09) 5위	(‘10) 2위	34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09) 10위	(‘10) 8위	34
	청년층 고용률 ¹⁾	(‘09) 31위	(‘10) 29위	34
	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	(‘08) 19위	(‘09) 2위	30
	ICT 서비스 수출비중	(‘08) 31위	(‘09) 30위	32
	노동생산성 증가율	(‘09) 12위	(‘10) 1위	34
	장기이자율*	(‘09) 22위	(‘10) 19위	32
	예대마진*	(‘09) 18위	(‘10) 16위	33
	전자정부 지수	(‘08) 6위	(‘10) 1위	30
	창업비용*	(‘09) 32위	(‘10) 29위	34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²⁾	(‘08) 26위	(‘09) 19위	33
	노동시장 유연성	(‘08) 24위	(‘09) 20위	34
	가계부채*	(‘08) 20위	(‘09) 18위	31
	단기외채비중*	(‘09) 25위	(‘10) 16위	31
	환율안정성	(‘09) 30위	(‘10) 23위	32
사회통합 (2개)	기대수명	(‘08) 17위	(‘09) 14위	30
	범죄율*	(‘04) 17위	(‘09) 12위	30
환경(1개)	생태발자국지수 ³⁾	(‘05) 27위	(‘07) 23위	32
인프라 (5개)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07) 5위	(‘08) 2위	25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과학)	(‘06) 7위	(‘09) 3위	30
	취업유가격*	(‘09) 22위	(‘10) 16위	33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수	(‘09) 5위	(‘10) 2위	34
	외환거래량	(‘07) 14위	(‘10) 11위	29

[2] 악화지표

분류	지표명	전년도 순위	올해 순위	비교 국가수
경제 (12개)	청년층 실업률*	(‘09) 5위	(‘10) 8위	34
	ICT 제품 수출비중	(‘08) 2위	(‘09) 3위	34
	유선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09) 7위	(‘10) 10위	34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	(‘09) 11위	(‘10) 14위	34
	조세부담률*	(‘08) 8위	(‘09) 10위	33
	인구 천명당 (파업)근로손실일수 ⁴ *	(‘07) 24위	(‘08) 26위	31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⁵	(‘08) 24위	(‘09) 27위	32
	GDP대비 경상수지	(‘09) 7위	(‘10) 12위	34
	해외 직접투자액	(‘09) 15위	(‘10) 17위	34
	서비스수지	(‘09) 28위	(‘10) 31위	34
	사업서비스업 ⁶ 부가가치비중	(‘08) 26위	(‘09) 31위	32
사회통합(1개)	지니계수*	(‘04) 17위	(‘08) 20위	33
환경 (4개)	1인당 CO ₂ 배출량 증가율*	(‘06-‘07)24위	(‘07-‘08)28위	30
	에너지 수입률*	(‘08) 25위	(‘09) 27위	31
	화석연료 사용비중*	(‘08) 18위	(‘09) 21위	34
	GDP대비 환경세 수입비중	(‘08) 8위	(‘09) 16위	34
인프라 (3개)	도로보급률	(‘09) 15위	(‘10) 17위	30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07) 6위	(‘08) 9위	26
	GDP대비 채권발행 잔액비중	(‘09) 6위	(‘10) 11위	32
	은행 무수익여신 비율	(‘09) 5위	(‘10) 8위	33

*표한 지표는 낮은 순서로 순위를 산출

1」 15~24세 기준

2」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지급 등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의미

3」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

4」 우리나라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0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OECD 각국의 비교가능한 최신 통계가 없어 순위에 미반영

5」 실업급여 등 노동시장의 안전망 정책을 의미

6」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 활동 등

Ⅲ. 주요 이슈 분석

* 이슈 분석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집필진의 개인적 의견임

1. 기술혁신

□ (현황 및 문제점) 기술혁신의 양적 투입지표*는 좋은 편이나, 질적 성과**가 미흡

* GDP 대비 R&D 지출 비율: 3위/30개국,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 2위/30개국

**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22위/30개국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 23위/24개국

□ (개선방향) 성과 확산에 초점을 둔 혁신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정보 인프라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 기술이전 전문인력 확충 및 기술평가 시장 활성화

2. 사회자본

□ (현황 및 문제점) 신뢰지수, 자원봉사 참여 비중, 법치신뢰수준, 부패지수, 단체 참여 비중 등 대부분의 관련 지표가 하위권

* 신뢰지수: 13위/19개국,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15위/17개국

자원봉사자 비중: 16위/28개국, 법치수준: 25위/34개국, 부패지수: 22위/30개국

공식적 단체 참여비중: 16위/18개국, 비공식적 단체 참여비중 12위/21개국

□ (개선방향) 의사소통 원활화를 통해 공공부문 신뢰를 제고하고, 부패 개선, 기회의 균등 확대를 통한 공정성 제고

○ 기부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정부 지원 강화

○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유도

3. 고등교육

- (현황 및 문제점)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유학생 유출률과 인구대비 우수대학 수 지표 측면에서 고등교육 여건의 개선이 필요

* 25~34세 인구 중 대학졸업자 비중: 1위/30개국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비중: 2위/25개국

**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 23위/26개국, 인구대비 우수대학 수: 17위/24개국

- (개선방향) 대학교육과 산업현장 간의 미스매치 완화

-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학과 조정의 원활화 및 대학의 다양화 촉진

4. 양극화

- (현황 및 문제점) 2010년 지니계수, 빈곤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OECD 선진국과 비교해 좋지 않은 편이며, 임시근로자 비중 등 산업간·기업규모간 고용·소득의 양극화 존재

* 임시직 근로자 비중(낮은순서): 27위/31개국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배율: 2위/32개국

중소제조업 부가가치고용배율: 21위/25개국

- (개선방향) 성장 선도 부문을 일류화하고 성장 지체 부문의 도약 여건 마련

- 선도 부문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제조업, 전통 서비스업 등 혁신 잠재집단 역량 강화

- 저소득층 등 한계집단에 대한 보호 및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취약층 고용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

5. 외국인력 유치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낮은 수준이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외국인력 유치정책 필요
 - *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위/24개국(최근 10년간 약 4배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전망(2050년): 29위/30개국
- (개선방향)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 및 비전문인력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중장기 활용방안 마련
 - 전문 인력의 경우 대·중소기업형 인력을 구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 비전문 인력의 경우 선발·채용·교육 방식 개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추진

6. 중소기업

-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많으나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같은 질적 측면이 미흡
 - * 중소기업 업체 비중: 16위/26개국,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5위/26개국
중소제조업 부가가치고용배율: 21위/25개국
- (개선방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정책 간 통합·연계를 통해 지원체계를 효율화 하고, R&D 투자 대상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집중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관계 구축을 유도하고, 연구기관·대학·특성화고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급·숙련 인력 확보

IV. 향후 계획

- 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국가경쟁력 강화 종합 전략 등 향후 정책방향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관계부처·연구원 등에 배포하여 국내 정책개발, 국가 홍보 등에도 활용

- 지표별 시계열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의 정보 활용도 제고
 - 현재 각종 지표에 대한 외국과의 일목요연한 비교 자료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어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상황

- 향후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에서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처별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16개 중점관리지수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가 목적
 - IMD, WEF 등 국제기관의 평가결과와 함께 우수·취약 분야의 판단기준으로 활용
 - 우리나라의 지속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